

세월호 참사 2년 정부의 계속되는 '세월호 지우기'에 함께 맞서자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은 국가 기관들의 비협조와 무시로 인해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3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인 강해성은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타수 조준기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2014년 2월에 세월호의 조타기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이 청해진해운과 단순한 보안점검 관계 이상으로 밀접했음이 확인됐다.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은 “청해진해운에서 운행하는 선박들 중 세월호만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고 제기했다. 청해진해운 전 기획관리팀장은 사고 당시에 국정원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두 번 주고 받았고, 2분 넘게 통화했다.

제주 교통관제센터(VTS) 교신 기록과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항적도가 편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런 영터리 자료를 근거로 수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자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인데도 해수부는 특조위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절단 작업을 최근 통보했다. 심지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인양 계약서조차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청문회가 끝난 후, 4·16연대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한 혐의·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났다”며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여러 의혹을 수사·기소할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6월 30일에 특조위를 종료시키려 한다. 특조위에 예산이 편성돼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게 사실상 지난해 9월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이 활동 개시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올해 예산과 인력 편성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에 특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2014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조사기구의 기소권·수사권 보장을 거부하며 특검이 담긴 반쪽짜리 특별법 수용을 압박해 놓고, 유가족들이 특검 실시를 요구하자 이마저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교육부는 전교조가 발행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의 학교 수업 활용을 금지하는 등 세월호 지우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 완화가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됐는데도 규제 완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냉대와 무시, 공격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다.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2월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해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를 방문해 간담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운동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 호소에 화답해, “지겹다”는 역겨운 말이 거짓임을 보여 주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010-5443-2395)

<http://stu.workerssolidarity.org/>

4·16세월호 참사 2주기 <약속콘서트>

일시 : 4월 9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청광장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사전행사]

기억과 약속의 동서남북 416 걷기

4월 9시 3시. 대학생들은 2호선 신답역 광장에서 출발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

일시 : 4월 16일 오후 7시 장소 : 광화문 중앙광장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사전대회]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 대학생 대회(가)

4월 16일 3시 마로니에 공원

세월호 참사 2년 정부의 계속되는 '세월호 지우기'에 함께 맞서자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은 국가 기관들의 비협조와 무시로 인해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3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인 강해성은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타수 조준기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2014년 2월에 세월호의 조타기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이 청해진해운과 단순한 보안점검 관계 이상으로 밀접했음이 확인됐다.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은 “청해진해운에서 운행하는 선박들 중 세월호만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고 제기했다. 청해진해운 전 기획관리팀장은 사고 당시에 국정원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두 번 주고 받았고, 2분 넘게 통화했다.

제주 교통관제센터(VTS) 교신 기록과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항적도가 편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수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자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인데도 해수부는 특조위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절단 작업을 최근 통보했다. 심지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인양 계약서조차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청문회가 끝난 후, 4·16연대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과정과 감사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한 혐의·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났다”며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여러 의혹을 수사·기소할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6월 30일에 특조위를 종료시키려 한다. 특조위에 예산이 편성돼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게 사실상 지난해 9월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이 활동 개시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올해 예산과 인력 편성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에 특조위는 존재하지 않

게 된다.

2014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조사기구의 기소권·수사권 보장을 거부하며 특검이 담긴 반쪽짜리 특별법 수용을 압박해 놓고, 유가족들이 특검 실시를 요구하자 이마저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교육부는 전교조가 발행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의 학교 수업 활용을 금지하는 등 세월호 지우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 완화가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됐는데도 규제 완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냉대와 무시, 공격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다.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2월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해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를 방문해 간담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운동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 호소에 화답해, “지겹다”는 역겨운 말이 거짓임을 보여 주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010-5443-2395)

<http://stu.workerssolidarity.org/>

부산 세월호추모문화제

일시 : 4월 9일(토) 오후 7

장소 : 부산역 광장

주최 : 세월호 부산대책위원회

[사전행사]

기억과 약속의 동서남북 416 걷기

4월 9일 3시. 대학생들은 2호선 신답역 광장에서 출발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

일시 : 4월 16일 오후 7시 장소 : 광화문 중앙광장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사전대회]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 대학생 대회(가)

4월 16일 3시 마로니에 공원